2015년 9월 5일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결성을 위해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한일관계재설정캠페인 2015 사무국장

식민지주의 청산, 강제연행문제 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패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본의 패전은 곧 한반도의 해방(광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청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후 20년이 되는 해인 1965년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만, 한국병합조약(1910년)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보류’되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도 애매하게 되었으며, ‘경제협력’이라는 방식으로 ‘결착’이 시도되었습니다. 국교정상화는 한일 간에 다양한 교류를 만들어 냈고 한일 간의 상호의존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위안부’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민지지배 아래에서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일본 정부, 국회에게 있습니다. 단 그 배경에는 일본 민중 속에 한국·조선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식민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해야만 합니다. 식민지지배와 그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은 모릅니다. ‘위안부’문제, 강제연행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 여부를 말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경과로 실행되었는가, 그 실태는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가지 않고서는 과거를 극복하고, 식민지주의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일 시민의 교류와 학습을 한층 깊이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식민지역사박물관’(가칭)을 건립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지 권력에 영합하여 그 지배에 가담한 ‘친일파’에 대해 연구하여 국가와 사회적 반성을 이끌어 냈고,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제정과 강제동원 피해자보상 소송 지원 등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연구 단체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활동 속에서 식민지지배에 관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보존, 조사·연구, 시민교류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가까운 활동의 축적을 바탕으로 식민지주의의 극복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활동의 거점이 될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일본의 연구자, 시민 등이 찬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본 국내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을 뒷받침하고 협력하기 위한 체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충실히 모을 필요도 있습니다. 조사·연구에 대한 협력 등도 불가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본에서 뒷받침하고 협력해 가는 것도 필요합니

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일본의 식민지주의 극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지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회 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회'(준비회)를 개최하여 지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 조직화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건설의 취지와 일본에서 협력·지원하는 의의를 이해해 주시고 준비회 참가, 지원회 활동에 대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